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77
----------	-------

발의연월일 : 2021. 7. 28.

발 의 자 : 양정숙 · 김홍걸 · 안호영
조오섭 · 황운하 · 이용호
윤준병 · 이규민 · 심상정
김성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스톱킹행위의 신고자의 요청으로 스톱킹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통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긴급응급조치뿐만 아니라 그 취소 또한 스톱킹행위의 상대방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은 사실상 새로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통지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083호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응급조치를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p> <p>① ~ ④ (생략)</p> <p><u><신설></u></p>	<p>법률 제1808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가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p>
<p>⑤ (생략)</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